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출범 및 첫 회의 개최

-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변호사, 교사, 학부모 등으로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구성
- 제2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 심의

교육부(장관 최교진)은 3월 16일(월) 서울정부청사에서 새롭게 구성된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주재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제2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구성>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국무총리(위원장)와 대통령이 위촉한 공동위원장, 장관급 정부위원과 위촉위원 총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한다.

새롭게 위촉된 제7기 위촉위원들은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교폭력 대책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변호사, 학부모, 교사 등 8명으로 구성되었다. (붙임2: 제7기 위촉위원 명단) 임기는 2026년 1월 28일부터 2028년 1월 27일까지 2년이다.

위원회 개최 이전 마련된 제7기 위촉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위촉위원에게 대통령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유기홍 위원장을 비롯한 위촉위원들은 대책위원회 활동에 임하는 각오를 밝히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유기홍 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멎게 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학부모님,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만큼 함께 소통하며 대안을 마련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제2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 심의>

이어 개최된 제2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는 유기홍 공동위원장 주재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하였다.

7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은 2025년 4월 마련된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5~’29)**’을 기반으로 학교폭력의 사법화 경향 심화, 사이버공간으로의 폭력 양상 다변화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피해학생 지원 정책에 대한 현장의 체감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피해학생 관점의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 (참고)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구성 : 5대 정책 영역(①교육 3주체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 ②학생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③학교의 교육적 기능 확대 및 사안처리 전문성 제고, ④위기 및 피·가해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⑤지역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반 구축), 15개 추진 과제로 구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 주요 내용>

-교육공동체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 제고: 또래 방어자 행동 촉진과 선도학교 육성-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3주체가 함께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 더불어 또래학생 스스로가 학교폭력을 막는 방어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또래상담 운영 학교를 확대(‘25. 5,592교 → ’26. 5,700교 목표)하고, 방어 행동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한다.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0교 내외의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도 육성해 나간다.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 제고: 범부처-민간 협업 활성화와 영상 유포 신속 삭제-

최근 학교폭력 발생이 사이버 공간으로 확산되면서 현장의 대응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이버 학교폭력 관련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각 부처의 과제가 제기되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는 사이버 공간에 유포된 학교폭력 유해 영상의 신속 삭제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부처뿐만 아니라 민간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업의 장(포럼, 민관 협의체)을 활성화한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관계회복 숙려제도 도입과 현장 지원 역량 강화-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있어서는 학교 내 갈등을 줄이고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관계 회복 중심의 제도를 확산한다. 초 1·2학년 대상으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 이전에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관계회복 숙려제도’를 2026년 3월부터 본격 도입하고, 이를 안착시키기 위해 관계회복 프로그램 보급과 담당자 연수를 실시한다. 학교폭력 제로센터 내 관계개선 지원단을 확대하여 (’25. 2,793명 → ’26. 2,900명 목표) 학교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의 피해학생 지원 체계 재정비-

피해학생 관점에서 지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피해학생 지원 체계를 재정비한다. 이전에는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찾아다녔다면, 앞으로는 학교폭력 신고·접수 시 학교장이 피해학생에게 지원 가능한 서비스, 보호조치와 절차를 신속하게 안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피해학생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관을 확대·다변화한다. 학교 단위에서는 위(Wee)클래스와 전문상담교사 확대를 추진한다. 지역 1차 지원기관인 위(Wee)센터, 병의원, 민간상담센터 등 피해학생 전문지원 기관 대상으로 자문(컨설팅), 연수를 실시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분리와 치유가 필요한 학생에게는 전국 단위 기숙형 치유센터를 통해 지원하는 한편, 피해학생이 집 근처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치유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광역 단위 전문교육기관 확대를 추진한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이행과 회복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사후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반 구축-

경찰청에서는 새로운 범죄 유형 사례를 학교에 신속 전파하는 ‘신종 유형 경보 제도’를 활용해 전국에 신종범죄의 위험성과 예방수칙에 대해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및 생활 주변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청은 학교,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육성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청소년유해업소 대상 「청소년보호법」 준수를 안내·홍보할 예정이다.

대책위원회에 참석한 정부위원과 위촉위원들은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은 단순한 사안 처리를 넘어, 우리 사회의 갈등 비용을 줄이고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근본적인 투자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였다. 앞으로도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최교진 장관은 “학교폭력의 진정한 종결은 단순한 사안 처리가 아니라 훼손된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라고 말하며, “올해는 관계회복 숙려제도의 확산, 신종 유형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피해학생 관점 지원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의 대응 체계(패러다임)를 교육 공동체의 신뢰 회복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제2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계획
2.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촉위원 명단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안)(요약본)
4. 2025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

담당 부서	학생건강안전정책국 학교폭력대책과	책임자	과장	김성희 (044-203-6972)
		담당자	서기관	우연선 (044-203-6978)
			주무관	지연하 (044-203-6979)

□ 제21차 대책위원회 개요

- 일시/장소 : '26.3.16.(월) / 15:30~17:00(총 90분 이내) / 정부서울청사
※ 정부서울청사(19층)- 정부세종청사(7동) 영상회의 동시 연결 예정
- 참석 : 총 14명
 - (정부위원: 6명) 교육부장관, 문체부·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경찰청 국장
 - (위촉위원: 8명) 유기홍(공동위원장) 외 7명
- 심의 안건(안)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안)

□ 세부 일정

시간(분)		내 용	비 고
15:30~15:50	20'	<사전행사: 위촉위원 위촉장 수여> ■ 교육부장관, 각 위원별 위촉장 수여 ■ 단체 사진 촬영 ■ 교육부장관 인사말씀 ■ 위원장 및 위원 인사말씀 ■ 마무리	장소: 무궁화홀 사회: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공개)
15:50~16:00	10'	■ 이동	무궁화홀 → 19층 영상회의실
16:00~16:10	10'	<제2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모두말씀	장소: 19층 영상회의실 사회: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주재: 공동위원장 (모두말씀까지 공개)
16:10~16:20	10'	■ 안건 보고	교육부장관
16:20~16:55	35'	■ 안건 심의·의결	공동위원장
16:55~17:00	5'	■ 마무리 말씀 및 폐회	공동위원장

※ 세부 일정은 변동 가능

연번	소 속	직위	성명 등	비고
1	사단법인 미래교육희망	이사장	유기홍	위원장
2	대영 초등학교	학부모 부회장	심은주	위원
3	국립중앙 의료원	정신과 전문의	이소희	위원
4	서울 방학중학교	교사	이호욱	위원
5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이희성	위원
6	대구 동도중학교	교장	장진욱	위원
7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 예방연구소	부소장	최현주	위원
8	법무법인 엘에프	변호사	한아름	위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안)(요약본)

2026. 3.



관계부처 합동

I. 추진 배경

- 학교폭력이 전 사회적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05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 ※ 1차: '05~'09 / 2차: '10~'14 / 3차: '15~'19/ 4차: '20~'24 / **5차: '25~'29**
- 교육 3주체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활성화 등을 위한 '제5차 학교폭력 기본계획('25~'29)' 수립

〈제5차 기본계획 기본 추진방향〉

- 교육공동체의 역량을 증진하여 신뢰의 학교문화 구축
- 공정하고 교육적인 학교폭력 대응체계 구축
- 학교폭력 파·가해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 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과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II. 현황

- **(인식)** 학생들의 학교폭력 경험 및 인식을 조사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지속해서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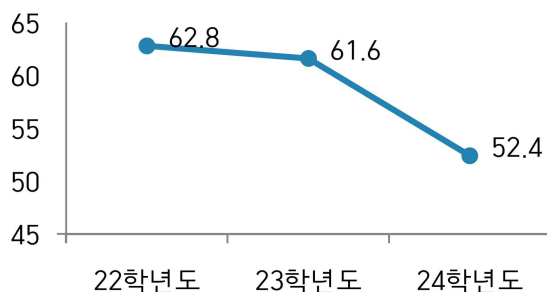
【 연도별 피해응답률(%) 】

학교급	'19년 1차	'20년	'21년 1차	'22년 1차	'23년 1차	'24년 1차	'25년 1차
전체	1.6	0.9	1.1	1.7	1.9	2.1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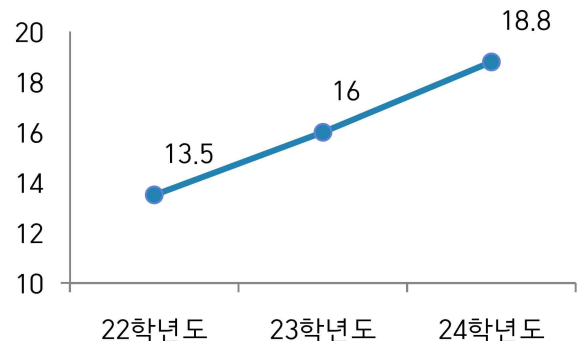
- '25년 기준, 학교급별로는 초 5.0% > 중학생 2.1% > 고 0.7% 순

- **(사안접수심의)** '24학년도 기준, 사안접수 건수는 전년대비 감소(58,502건, 2,943건 ↓), 심의 건수는 전년대비 증가(27,835건, 4,256건↑)

【 사안접수 건수 중 학교장 자체해결 비중 (%) 】



【 심의 결과 학교폭력 아님 비중 (%) 】



III. 주요 성과 및 보완 필요 사항

□ **(성과)** 5개 정책 영역별 총 59개 세부과제 구성 및 이행(7개 부처)

※ 교육부 38개, 과기부 3개, 법무부 4개, 문체부 1개, 성평등가족부 5개, 방미통위 3개, 경찰청 5개

5개 정책 영역별 세부과제 주요 성과(25년 시행계획 기준)

1	교육 3주체가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기반 마련
	① (예방교육) 기존 학생 중심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교육 3주체 대상으로 고도화 추진(~25.12.) 및 학생 소통 콘서트(68회), 참여 중심 체험 연극 58회 총 13,378명 참여 등 학생 중심 예방 활동 실시 ② (사회정서교육) 모든 학교에 사회정서교육을 전면 도입(25.3.), 이를 위한 중앙지역 현장지원단 구성 운영 ③ (생활지도)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및 개별학생 교육지원, 교내 스마트폰 기기 사용 제한 법 개정(25.)
2	학생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확대
	① (민관 협력) 네이버, 카카오, 메타, 엑스, KT 등 민간기업과 관계부처가 상호간 디지털 내 청소년 보호 조치 정책 현황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논의(25.12.3.) / KT 연계 청소년 대상 디지털 과의존 예방 공모전(25.4~8.) ② (보호조치) 디지털 성범죄 유통 방지 모니터링 126,624건,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모니터링 11,237개 ③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범부처 협력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실시 ▪ (교육부) 신규 사이버울림(4종, 120차시) 탑재 및 사이버폭력 예방 주간 운영(25.6.) ▪ (경찰청) 사이버 도박 등 위험성 인식·체험할 수 있는 VR 활용 체험교육프로그램 제작·배포(25.12.) ▪ (방미통위) 초·중고 대상 전문강사 파견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윤리 교육 실시(139명, 25.11월 기준) ▪ (과기부) 전국 18개 스마트센터 기반 유관기관 협력 청소년 대상 디지털 과의존 예방교육 운영 ▪ (성평등가족부) 이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서트 개최(6종) 및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플랫폼 탑재 ▪ (법무부) 청소년 비행예방센터(18개소) 전 교육과정에 답애플 등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편성·운영 ▪ (문체부) 초·중등 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 대상 게임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학교폭력 사안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내실화
	① (역량 제고) 학교폭력제로센터 내 전담조사관 연수 총 329회, 컨설팅 총 4,115회, 관계기관지원단 연수 총 201회 ② (제도 개선) 경미한 사안의 경우 파기하학생 분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25.5.)
4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피해학생 지원 가해학생 선도교육 추진
	① (학맞통) 학맞통 전면 도입(26.3.)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및 찾아가는 연수 1,033회, 선도학교 436개 운영 ② (지원)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확대(24.1,168명→25. 1,256명)와 Wee클래스 확대(24.9,115교→25. 9,407교)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415건, 소송 구조 64건, 범죄피해지원센터를 통한 경제적 지원 165건 등 ③ (선도) 42개 청소년경찰학교에서 가해학생 약 1,200명 대상 특별교육 실시, 보호관찰학생 439명 교사 433명 멘토링
5.	지역별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부처별 협업 강화
	① (CCTV 확대) 시도교육청과 협약하여 전국 초·중등학교급 CCTV 약 1만 2천대 확대(25.1~11.) ② (신종 유형 경보) 인스타 릴렛 사기 등 신종 유형 발생 경보를 통해 학생 및 학부모 경각심 제고 ③ (점검 및 단속) 수능 전후 및 동계방학 동안 유해업소 단속 학교밖가정밖 청소년 발견 전문기관 연계 등

□ (보완 필요 사항)

-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원 등 인식 변화가 동반되어야 하며, 학생들이 갈등 조정 등 관련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 강화 필요

〈현장목소리〉 학생 대상 관계맺음, 공감 감수성 제고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관계 맺는 방법을 익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함(또래상담 학생 간담회, '25.8.)

- 다양화되는 사이버폭력, 신종 유형 사례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부처 및 민간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 활성화 필요

〈현장목소리〉 SNS 특성상 과거보다 다양한 방식의 학교폭력이 발생(피해학생 제외 단톡방 개설, 인스타그램을 통한 저격글 등)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느낌(학생간담회, '25.8.)

- 초기 갈등 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다양한 관계회복 제도를 활성화하여 신뢰 중심의 문화를 조성할 필요

〈현장목소리〉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학부모의 민감한 반응으로 인해 학생간 갈등이 해소되었음에도 학부모가 자체종결을 원하지 않고 심의로 가는 경우가 많음(책임교사 간담회, '25.8.)

- 사안처리 과정상 피해학생 관점에서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피해학생 맞춤형 지원기관을 확대할 필요

〈현장목소리〉 신고 및 접수 단계부터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 절차 등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학생 맞춤형 지원기관 확대와 지원 후 추수관리에 대한 강화 필요(국회 토론회, '26.1.)

- ➔ 교육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갈등 조정 정책·제도 확산 필요**
- ➔ 사이버폭력 등 신종 유형에 대한 **대응력 제고 지원 필요**
- ➔ 피해학생을 중심으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 개선 필요**

IV. 26년 시행계획 기본방향 및 과제 구성

- **(구성)**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5차 기본계획 비전)과 5대 정책영역을 기반으로 26년 중점 추진 사항 중심 과제 추진
- **(26년 중점 추진)** ① 신뢰의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관계회복 숙려제도 확산 ② 신종 유형 관련 부처-민관 협력 강화 ③ 피해학생 관점 지원 강화
- **(과제 구성)** 7개 부처 15개 추진과제, 61개 세부과제 구성

(단위:개수)

구 분	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문체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경찰청
26년	40	3	4	1	5	3	5
25년	38	3	4	1	5	3	5

V. 정책영역별 추진 계획

1 교육 3주체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

- ❖ **교육 3주체 중심 학교폭력 예방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 **사회정서교육 현장** 안착·협력적 인성교육 확산을 위한 체육·예술 교육 확대
- ❖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선도모델 발굴

① 어울림 더하기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계·통합

- (맞춤형 예방교육) 기존 학생 대상 어울림(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교육3주체 대상 '어울림+(어울림 더하기)'로 확대하여 대상별 맞춤형 교육자료 개발
- (학생 참여 활동)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해결방안 모색하는 또래 상담 운영 확대* 및 방어행동 촉진하는 프로그램 개발·보급**(‘26.상~) **신규**

* 또래상담 운영학교 수 (‘24) 5,041교 → (‘25) 5,592교 → (‘26) 5,700교(목표)

** 사례중심 실감형 영상 콘텐츠 3종, 역할극·토론 등 체험형 활동 키트 개발·보급(‘26.3.~)

- **(인연 도림교)**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 자치회 중심으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해 '학교문화 책임규약 제정' '갈등 예방 순찰대' 결성하여 방아 활동 적극 참여하여 학교폭력 대폭 감소(25.1학기 10건 → 2학기 0건)

- (사회정서인성교육 확대) 사회정서교육을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 재구조화 하여 보급*, 학교스포츠클럽·학생 예술 동아리 활동 확대

* 전국단위 교사연구회, 현장 지원 선도교사 1,500명 양성을 통해 현장 안착 지원

②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지원 확대로 학교폭력 사전 예방

- (교원·관리자·예비교원) 교장·교감 연수 시 생활지도 지원을 위한 교과목 필수 편성, 신규 교원 생활지도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지원)청 연수 필수 운영
- 예비 교원 대상 생활지도 역량 함양을 위해 교직 과목 생활지도 내용 강화 추진
- (제도적 보완) 개별학생교육지원, 스마트폰 사용 제한 등 법 개정 사항 고시 개정(「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26.3.1. 시행)

③ 직장교육 연계 학부모 교육 활성화

- (온라인 직장교육)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협업하여 온라인교육플랫폼(edu.kihf.or.kr)을 활용한 자녀 인성교육, 학교폭력 예방 직장교육 실시

④ 신뢰와 존중의 교육공동체 문화 확산

- (선도모델 발굴) 고위기학교 중심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운영(‘26. 200교 내외) **신규**
※ 어울림 더하기 프로그램 우선 지원, 관계회복 숙려제도 지원 대상 확대 운영 등

- ❖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고도화**
- ❖ **학교폭력 영상 신속 삭제 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 개정 추진
- ❖ 각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한 **학생 사이버폭력·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①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기업 참여 확대

- (제도적 지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사업자 점검(방미통위)과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의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 실시(성평등가족부)
 - ※ 청소년보호 조치 이행여부 모니터링 및 결과 분석,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여부 상시·현장점검, 투명성보고서 홈페이지 탑재
 - *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에서 운영 중이며 약 100여명이 일 3시간 재택근무 중
- (기술적 지원) 딥페이크 역기능 전주기적 대응 신규 R&D 추진. 사이버 폭력 감자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사이버안심존’* 보급 확대** (과기부, 방미통위)
 - * 사용시간 관리, 사이버 언어폭력·성범죄 의심문자 감지 등으로 학교와 가정이 함께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행태 및 이용 시간 등을 관리 지도할 수 있는 앱
 - ** 아이패드용 자녀용 앱 개발·등록을 추진하여 청소년 접근성 확대

②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Digital SAFE 캠페인 추진(범부처 협업)

- (협업의 장) 사이버폭력예방 실무협의체*와 ‘Digital SAFE’ 포럼 운영, 올바른 디지털 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 ‘디지털 ESG 협의체’** 확대(과기부)
-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7개 부처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6개 기관
- ** 국민의 일상과 가깝고 디지털 전환이 활발한 분야의 민간기업과의 협력 거버넌스

③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조치 차별화 및 사이버폭력물 삭제 지원

- (신속 삭제) 학교폭력 유해영상의 신속한 삭제를 지원하기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방미통위) 신규
 - ※ (전) 유해 영상 삭제시 대면 심의 원칙 →(후) 학교폭력 관련 영상의 경우 서면심의 가능하도록 개정
- (사이버 성폭력 예방) 디지털성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부(청)과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협의체 활성화(성평등가족부)
 - 학교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 콘텐츠(영상, 카드뉴스 등) 제작·보급

④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춘 디지털 시민 양성

- (다양한 교육자료 개발) 각 부처 전문성 활용, 학생·교원·학부모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및 사이버폭력 예방 콘텐츠 개발

- (교육부) 전국단위 교사연구회를 통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 학교 관리자 및 교원 대상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학부모 대상 가족 미디어 캠프 운영과 가정 통신문 등을 통한 학부모 연수 강화
- (과기부) 청소년 A·디지털 바른사용 교육과정 운영 SNS숏폼 등 최근 과업 동향 반영한 표준 강·안 등 개발
- (경찰청) VR 콘텐츠를 활용한 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배포 민간기업 협업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실시
- (방통위) 유아·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답답이, 사이버폭력 정보관향 등 디지털 역기능 예방 교육 및 콘텐츠 개발
- (성평등기주부) 타부처 협업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안내 콘텐츠 및 사례 기반 웹툰 등 예방교육 콘텐츠 한층 보급
- (법무부) 가해학생 대상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확대 일반 학생 대상 SNS 폭력 등 찾아가는 예방교육 운영

- (교육 활성화 지원) 범부처가 개발한 예방 콘텐츠를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란도란’을 통해 탑재·배포

- 매년 ‘사이버폭력 예방주간’ 운영(6월)을 통해 집중 교육 실시 독려

- (예방 활동) 신종 유형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학생 대상 정보 수집 활동 강화, 청소년치안정책자문단*을 통한 제언 발굴 (경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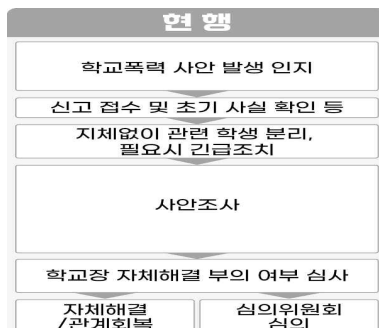
* 전국 261개 경찰서에서 3,046명을 선발·운영 중으로, 수요자인 청소년이 직접 학교폭력·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토론·제안을 진행하여, 치안 활동 및 정책설계에 참여하는 제도

3 학교의 교육적 기능 확대 및 사안처리 전문성 제고

- ❖ 일상적 갈등의 교육적 해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관계회복 제도 확산**
- ❖ **가해학생 조치 기준 객관성 제고**와 현장 상황을 반영한 처리 기준 보완

①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 지원 강화

- (숙려제 도입) 초 1-2 학년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심의 이전에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관계회복 숙려제도’ 도입(‘26.3.) **신규**



- (확산 지원) 제로센터 내 관계개선 지원단 확대(’25.2,793명 → ’26. 2,900명 목표), 관계회복 프로그램 안내서 보급·담당자 연수 실시
- ※ 별도 정책연구 통해 제도 효과성 검증 및 지원대상 확장 타진, 담당자 연수모델 개발 등 추진

② 학교폭력 대응 체계 개선 강화

- (전문성 강화) 전담조사관 업무매뉴얼, 전문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하고, 선임 학교폭력 조사관 지정을 통한 동료학습 지원
- (피해학생 보호 가이드 정비) 피·가해학생이 동일 상급학교에 배정된 경우에 대한 대응 등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가이드* 마련·안내(~’27.2.) **신규**
- * (주요 내용) 배정된 학교에서 관련 학생의 반을 분리 배정하여 동일 공간에서 학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학교 내 피해학생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③ 심의 객관성 확보 등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 (조치 객관성 제고) 가해학생 조치 판단요소별 판정점수·가중치 조정을 반영한 ‘가해학생 조치 세부 판단기준 고시’ 개정 추진(~’26.하) **신규**
- (심의 전문성 제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대상별 위원별(교원,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 맞춤형 교육자료 개발 및 연수 지원*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운영 안내서 및 학교폭력 전문인력 교육자료(14차시) 개발 및 보급(~’26.2.)

4 위기 및 피·가해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 ❖ **신고 즉시 피해학생 지원 절차·정보 안내**하는 등 선제적 지원 확대
- ❖ 피해학생 유형·정도에 맞는 **맞춤형 피해학생 지원기관 확대 및 내실화**
- ❖ 피해학생 조치 이후 회복 상태 등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 체계 구축**

①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체계로 위기학생 조기발견·지원, 피해학생 보호 강화

- (학생정보 공유·연계 등)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기관별·사업별로 보유한 학생 관련 정보 연계 및 통합관리체계 마련
-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시스템 구축 추진 중(’28.下 단계적 개통 예정)
- 교육청·학교 내 학교폭력 대응체계와 연계를 위한 연수, 매뉴얼 개정 추진
- (학생맞춤통합 지원) 피해학생이 학맞통을 통해 적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확대(’25. 1,256명 → ’26. 1,300명 목표)
- 가해학생 대상 상담, 조사 과정에서 복합적 위기가 감지되는 경우 본인 동의를 전제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와 연계하여 가해행동 원인 제거

- (선제적 안내·지원) 학교폭력 신고·접수시 학교장이 피해학생에게 지원 가능한 서비스, 보호조치·절차를 신속 안내하도록 제도 개선 **신규**
 - * 시도교육청 공동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 및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피해학생 지원 절차 및 지역 내 지원 기관 안내서 제작·배포(~'26.)
- (학교 내 지원) Wee 클래스 및 전문상담교사 등 상담인력 지속 확대 추진
- (지역 1차 지원기관) 지역 Wee센터, 병원, 민간상담센터 등 피해학생 전문지원기관 역량 제고를 위한 기관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연수 실시
 - * 기관 활용 프로그램 개발 현황 : ('24) 초등학생용 →('25) 중·고등학생용 →('26) 사이버폭력
- (광역별 거점형 기관) 시·도 단위로 교육·치유를 통합 지원하는 피해학생 전문교육기관 확대 추진 **신규**



- (사후 관리) 학교장이 심의위원회에서 부과한 피해학생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교육장에게 보고, 회복상태 주기적 관찰 **신규**
 -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피해학생 대상으로 면밀한 모니터링 실시(경찰청)
- (서비스 지원) 지역 기관 활용 피해학생 대상 법률서비스, 치료비·생계비 경제적 지원, 치유·일시보호 서비스 지속 확대(**법무부**)
- (다문화장애 맞춤형 지원) 학교생활 통번역 서비스 지원(**성평등가족부**)
 - SPO의 다문화학생 피해예방·보호지원 우수사례 공유·확산(경찰청)
 - 온라인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 운영하여 인권침해 신속 대응

② 가해학생 조치 실효성 제고 및 재발방지 지원

- (조치 개편)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 양상 변화에 대응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제도 개편 정책연구 추진('26.6~) **신규**

- (특별교육 내실화)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내 회복적 사법 이념 프로그램*을 도입한 전문교육 실시와 특별교육 확대('26.4,000건)(**법무부**)

* 회복적 사법 이념이란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사회적 관계 회복을 중시하는 이념으로, 법무부에서 자체 개발하여 기존 법원 처분 소년 수강 프로그램에 활용('20~)

- SPO의 가해학생 면담 멘토링 지속 추진·경찰단계 선도제도 내실화(**경찰청**)

5 지역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반 구축

- ❖ 새로운 학교폭력·범죄 유형을 **신속히 학교에 알리는 '경보제도' 전국 확대**
- ❖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유관기관 협력 단속 지속

① 지역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

- (실태조사 개편) 조사 결과 활용도 제고 및 지역별 맞춤형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 정책연구 실시* **신규**

* (주요 내용) 1차 실태조사 문항 개편, 2차 실태조사의 질적 조사 모델 개발

- (지역별 대책 수립) 지자체, 교육청이 각각 수립하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 및 시행계획 수립 현황 모니터링

②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환경 관리

- (신중 경보 확대) 지역별 자체 운영 중인 '**신중 유형 경보제도**'를 전국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경찰청**)

※ 경찰청의 신중유형 발생 경보 외에도 서울청(긴급 스쿨벨), 전북청(스쿨경보), 대전청(청소년 비행경보), 경기남부청(스쿨폴넷), 경기북부청(폴리슈) 등 각 시·도청별 경보제도 병행 운영 중

- (보호인력)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배치 확대·운영 지속 및 학교 전담경찰관(SPO) 1인당 담당 학교 수('25. 1인당 10.6교) 완화 추진 (**경찰청**)

- (학교 주변) 학교·지자체·청소년육성회 등 유관기관 협업 술·담배 판매업소· 청소년유해업소 대상 「청소년보호법」 준수·안내 홍보(**경찰청**)

③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비폭력 문화) 초·중·고 학교급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활동 지원

VI. 향후 계획

- 26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시행계획 세부 과제 이행 점검('26.하~'27.상)

〈참고〉 2026년 시행계획 과제별 소관 부처

과제	소관부처
1. 교육3주체의 학교폭력 예방역량 강화	
1-1. '어울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계·통합	
☐ 학생·교원·학부모 대상 '어울림+' 개발·보급	교육부, 교육청
☐ 모든 학교에서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운영	교육부, 교육청
☐ 체육·예술교육 활성화로 협력적 인성교육 강화	교육부, 교육청
☐ 다양성을 존중하는 장애이해·다문화교육 내실화	교육부, 교육청
1-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지원 확대로 학교폭력 사전 예방	
☐ 교원 연수 강화로 학생생활지도 전문성 제고	교육부, 교육청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교육부, 교육청
1-3. 학부모 연수·소통 확대를 통한 가정의 교육적 역할 강화	
☐ 직장교육 연계 학부모교육 활성화	교육부, 교육청
☐ 함께학교 플랫폼 등을 활용한 학부모연수·상담 지원	교육부, 교육청
1-4. 신뢰와 존중의 교육공동체 문화 확산	
☐ 학교문화 책임규약 거점학교 지정·운영	교육부, 교육청
☐ 학교문화 책임규약과 '함께학교 캠페인' 연계	교육부, 교육청
2. 학생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2-1.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기업 참여 확대	
☐ 사이버공간에서 학생 보호를 위한 기업의 책무성 강화	교육부, 과기부, 방미통위
☐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이버폭력 조기 감지·차단	과기부, 성평등가족부,
2-2.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Digital SAFE' 캠페인 추진	
☐ 캠페인 등 홍보를 강화하여 사이버폭력 예방 문화 조성	교육부, 교육청
☐ 사이버폭력 신고·예방 관련 정보를 우선 노출하여 경각심 제고	교육부, 교육청
2-3.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조치 차별화 및 사이버폭력물 삭제 지원	
☐ 사이버폭력 가해 콘텐츠 신속 삭제 지원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방미통위
2-4.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춘 디지털 시민 양성	
☐ 올바른 미디어 사용을 위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교육부, 교육청
☐ 범부처 협력 사이버 안전교육 강화	교육부, 경찰청, 방미통위,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과기부, 문체부
3. 학교의 교육적 기능 확대 및 사안처리 전문성 제고	
3-1.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 지원 강화	
☐ 초등학교 저학년·경미한 사안의 관계회복 숙려기간 도입 추진	교육부, 교육청

과제	소관부처
☐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제도 개선	교육부, 교육청
3-2. 학교폭력 대응체계 개선·강화	
☐ 학교폭력제로센터의 통합지원 기능 확대	교육부, 교육청
☐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의 대응 지원	교육부, 교육청
3-3. 심의 객관성 확보 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 가해학생 조치 판정기준 마련 등 심의의 공정성 제고	교육부, 교육청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제도 개선을 통한 심의 지연 방지	교육부, 교육청
4. 위기 및 피·가해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4-1.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로 위기학생 조기발견·지원 및 피해학생 보호 강화	
☐ 조기발견 및 지원 기반 마련으로 학교폭력 사전 예방	교육부, 교육청
☐ 전담지원관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에 참여하여 피해학생 지원 강화	교육부, 교육청
☐ 학교·전문지원기관 역량 강화로 피해학생 심리·정서 지원	교육부, 교육청
☐ 피해학생·보호자 대상 법률·의료 지원 강화	교육부, 법무부
☐ 이주배경학생, 장애학생 등 학생 특성을 고려한 지원 강화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4-2. 가해학생 조치 실효성 제고 및 재발방지 지원	
☐ 가해학생 조치를 전면 개편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선도 방안 마련	교육부, 교육청
☐ 전문기관과 연계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전문화	교육부, 교육청, 법무부, 경찰청
☐ 학교전담경찰관(SPO)의 가·피해학생 선도·지원 역할 강화	교육부, 경찰청, 교육청
☐ 소년법 적용 수준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교육	법무부
5. 지역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반 구축	
☐ 지역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 데이터 기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 지원	교육부, 교육청
☐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환경 관리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교육부, 교육청

【 2025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요 】

- ▷ 조사대상 : 초4~고2 재학생 약 6.5%(약 22만 명) / 참여율: 76.6%(17만 명)
- ▷ 조사기간 : '25.9.22.~10.21.(4주) / 온라인 조사
- ▷ 조사내용 : '25년 1학기부터 응답 시점까지의 학교폭력 목격·피해·가해 경험 등
- ▷ 조사시행: 17개 시도교육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위탁)

□ 피해 응답 현황

조사 내용	주요 결과								
피해 응답률	구분	전체		초	중	고			
	비율(%)	3.0		5.1	2.4	1.0			
	명수(명)	5,319		3,227	1,677	414			
피해 유형별 현황(%) (복수응답, 건수기준)	구분	언어 폭력	집 따돌림	단 신체폭력	사이버 폭력	강요	금품갈취	스토킹	성폭력
	전체	40.3	15.3	13.9	6.8	6.6	6.5	5.6	5.1
	초	39.0	15.0	15.0	6.4	6.9	7.2	6.6	3.9
	중	41.9	15.8	12.3	7.4	6.4	5.5	4.0	6.8
	고	43.5	16.7	10.8	7.4	5.2	4.8	4.7	6.9

□ 가해 응답 현황

조사 내용	주요 결과				
가해 응답률	구분	전체	초	중	고
	비율(%)	1.1	1.9	0.9	0.2
	명수(명)	1,922	1,211	617	94
가해 후 경험 (%)	구분	전체	초	중	고
	상대방에게 사과했다	57.8	59.5	54.9	54.4
	학교 선생님에게 지도를 받았다	14.0	11.0	18.8	21.4
	나의 보호자나 친척에게 꾸중을 들었다	12.3	12.6	12.3	8.3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8.9	9.6	7.0	12.3
	나도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	7.1	7.3	7.0	3.7

□ 목격 응답 현황

조사 내용	주요 결과				
목격 응답률	구분	전체	초	중	고
	비율(%)	7.7	11.2	7.5	3.0
	명수(명)	13,542	7,127	5,117	1,297
목격 시 감정 (%)	구분	전체	초	중	고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고 싶었다	29.5	36.1	22.7	20.4
	가해자에게 화가 났다	22.4	22.1	21.5	27.3
	도와줄 수 없어 속상했다	14.8	13.1	16.6	17.5
	나도 당할까봐 무서웠다	14.6	14.2	15.7	12.2
	별 생각이 없었다	12.8	9.4	16.8	16.3
	피해학생이 방어하지 못하는 게 답답했다	5.8	5.1	6.7	6.3

□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조사 내용	주요 결과				
학교 폭력 발생 원인 (%)	구분	전체	초	중	고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24.6	22.6	25.2	27.0
	강해 보이려고	17.3	16.8	17.6	17.8
	피해 학생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16.2	15.1	16.3	18.2
	화풀이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	15.4	15.4	15.3	15.8
	피해 학생과 오해가 있거나 의견이 달라서	8.0	8.1	7.9	7.7
	다른 친구나 선·후배가 하니까	6.4	7.0	6.5	5.0
	피해 학생이 먼저 괴롭혀서	4.9	6.6	4.3	3.0
	친구나 선·후배가 시켜서	4.4	5.3	4.2	3.1
	나의 보호자나 선생님께 관심을 받고 싶어서	2.8	3.0	2.7	2.4
학교 폭력 발생 시 대처 방법 (%) (복수응답, 건수기준)	구분	전체	초	중	고
	학교 선생님에게 알리겠다	28.5	28.3	28.9	28.3
	나의 보호자나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	17.7	18.2	17.8	16.6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어울림 앱 등에 알리겠다	11.9	13.8	10.9	10.5
	학교전담경찰관, 경찰에 알리겠다	9.8	8.9	9.8	11.5
	학교 상담실 선생님에게 알리겠다	9.7	9.3	10.0	9.8
	피해 학생을 위로하고 도와주겠다	8.6	9.7	8.1	7.6
	학교폭력신고함이나 학교 익명게시판에 알리겠다	4.7	4.3	5.0	5.0
	가해자를 말리겠다	3.8	3.9	3.6	4.1
	친구나 선·후배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	3.2	1.9	3.9	4.3
	학교 밖 상담 기관에 알리겠다	2.0	1.8	2.0	2.4

□ 학교폭력 예방교육 · 활동

조사 내용	주요 결과				
효과적인 예방 활동 (%)	구분	전체	초	중	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교육	28.5	36.8	24.9	21.8
	학교 안과 밖에 CCTV 설치	23.9	17.6	25.8	30.1
	인성교육, 스포츠 활동, 문화예술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	14.2	15.1	15.2	11.1
	학교전담경찰관의 활동	13.4	9.6	14.5	17.3
	학생 참여 활동	7.5	8.8	7.1	6.3
	학교 상담실 선생님의 활동	6.9	6.9	6.9	6.9
	학생보호인력의 활동	3.5	3.1	3.4	4.3
	기타	2.1	2.0	2.2	2.2
필요한 예방 활동 (%) (복수응답, 건수기준)	구분	전체	초	중	고
	학교의 관심과 지도	28.3	22.4	31.5	31.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교육	17.0	26.8	12.9	9.1
	학교 안과 밖에 CCTV	15.5	10.6	16.9	20.6
	학교전담경찰관	10.2	7.4	11.0	13.0
	공감 및 배려 등 인성교육	9.8	15.1	7.2	6.2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	7.3	6.1	8.8	6.5
	학생 참여 활동	4.2	4.2	4.2	4.0
	학교 상담실 선생님	3.3	3.1	3.3	3.5
	인터넷이나 게임 등 유해하고 폭력적인 영상물, 사이트 등에 대한 관리나 이용제한	2.3	2.4	2.0	2.4
	학생보호인력	2.2	1.7	2.2	2.8